

“정부 원전 정책 ‘역주행’ ”

민주,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출범… 박홍근 “안전 무능… 국민 피해 안돼”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효율과 경제성만 중시하다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재앙이 한반도에서도 발생할지도”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TF)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의 안전 무능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벼려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원전의존 비중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대통령은 본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올해야만 규모 2.0 이상 지진이 76회나 발생했다. 원전 수명연장이나 오염수 유출, 부실시공 등 안전상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많은 전문가가 신한울 1호기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정부를 이를 무시하고 지난 7일에 가동을 밀어붙였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에 나흘로 역주행은 물론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박 원내대표와 김 의원, 단장을 맡은 양미원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 이정운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이준택 전 건국대 물리학과 교수, 진재용 변호사, 정종한 원자력발전 기술사 등이 참석했다.

/뉴스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 알기 쉽게 표시

민주 윤준병 의원,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읍·고창)이 13일, 회관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의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환 제작 시 생화와 함께 사용되는 조화의 비율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만 표시·고지하도록 돼 있어 조화의 비율을 높이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화훼 생산



민주 도당, 전북 연탄은행에 기부금 전달
다음날 아침 전북도당 학부도 위원장 등은 13일 전북 연탄은행에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공)

농가의 매출 하락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훼의 양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사용한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 및 공공·민간 부문에서 국내산 화훼의 이용이 확대되어

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국내산 화훼 이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생화를 사용한 화환을 재사용할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생화만 재사용 표시를 하도록 해 조화를 섞거나 100% 조화를 사용한 화환들이 시중에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화훼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생화 사용 장려를 위한 제도를 적용해 화환에 생화 비율을 낮추고 조화를 늘려 소비자 기반 화훼 농가 매출 하락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손씻기



마스크착용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청년 의견 없는 청년정책, 알맹이가 없다”

김슬지 도의원 “전북형 청년정책 40% 이상, 정부서 추진

정책 조정위원회 내실 강화·청년참여예산제 도입해야”



으로 내려와 추진 중인 사업은 38개로 전북형 청년정책의 40% 이상이 전북의 의지가 아닌 중앙정부 추진 사업”이라며 수동적인 전북형 청년정책을 지적했다.

또 그는 “일부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청년정책이 아닌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내어 주민의식을 갖고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참여예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슬지 의원은 “청년 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안이다 전북의 미래”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 강화와 ‘청년참여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을 거듭 촉구하며 밸런스를 미쳤다.”

/김경수 기자

“전북 도로포장률 전국 꼴찌 수준”

나인권 도의원, “지방도 확·포장 집중 추진해야”



전북도의 도로 포장률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제3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만큼은 최소 10년 이내에 도로포장률 100% 달성을 목표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라북도 전체 도로 포장률은 87.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전국 평균 94.8%)이고 지방도의 포장률 또한 88.7%로 전남에 이어 선도로와 연계한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까지 투자한 예산은 1,784억원으로 총 사업비 5,172억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올해 전북도 예산(370억원)은 전국 평균 568억원) 투자 대비 65.1%에 불과하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각 지구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공정률을 살펴보니, 20년부터 3년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익산 제4신단~하나로 지구와 정읍 고부~영원 지구는 공정률이 각각 5%, 7%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나인권 의원은 “도시의 혈관이라 고 할 수 있는 도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상대적 소외를 당하며 도로 포장을 전국 꼴찌”라는 불평에 안고 있는 것은 매우 뼈이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전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새만금청, 오늘 비산모래 차단 방재숲 조성사업 현장 안전점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는 비산모래로 인한 새만금 배후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방재숲 조성사업(2차)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14일 진행한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새만금 방재숲 조성을 위해 공사 중인 1·2공구 2곳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일 안전점검 시행 여부,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화재 예방교육 실시 여부, 근로자와의 안전을 위한 보호구·방한복 착용

및 협약 등 건강 상태 확인, 근로자 쉼터·난방기 및 은수 제공시설 설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점검

경미한 문제점은 현장 조치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하게 조치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관리·감독한다.

/김영태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